

# 국힘 전대 룰 개정 시작...친윤계 “100% 당원 투표로”

### 1월초 목표 룰 개정 드라이브

### 친윤 주자들 “당심 비율 높여야”

### 안철수·유승민·나경원 개정 반대

### 전당대회 ‘尹心’ 향배에 촉각

국민의힘이 차기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룰 전쟁’이 시작됐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3으로 규정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비율을 9:1 또는 10: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심’은 당원투표를, ‘민심’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의미한다. 친윤계 주장은 전대를 사실상 당원 투표로 치르자는 것이다.

여권 핵심부에선 늦어도 내년 1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하고 전당대회 룰에 관한 당헌개정 작업에 나서는 로드맵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헌개정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다. 당심 비율을 ‘확’ 높이는 룰 개정에는 친윤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자리인 만큼, 야권 지지자가 응답할 수도 있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내후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차기 당권경쟁에서 친윤계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심 투표 비율을 높이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업은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인데 대체적 관측이다.

친윤계 일각에선 ‘이준석 사태’를 재현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전대를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에선 나경원 전 의원에게 밀리고도 압도적인 일반국민 여론조사 지지로 당선됐다.

이후 이 전 대표가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과 부딪치며 당내 분란을 초래했던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끝장”이라며

“당대표 선출 뒤 1년 뒤에 있는 총선과 연계해 당헌 개정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당심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비판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 룰 개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가 당내 다수 세력이긴 하지만, 전대 룰 개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룰에 따라 셈법이 엇갈리는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분출하고 있다.

친윤 주자인 김기현·권성동 의원은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고,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원투표 100%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1순위에 오르내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룰 개정을 놓고 “삼류 코미디”, “축구 골대를 옮기는 것” 등에 비유하며 작심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내며 비운(비운석열) 대표주자로 꼽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난 경선 때 9:1에서 7.5:2.5로 민심 비율을 올린 것을 거론한 뒤 “우리당이 7:3에서 9:1 정도로 바꾸는 것은 모양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면 지금 같은 7:3 비율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 의원들은 유 전 의원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정재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이 나 하나 때문에 룰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럴 일은 없다. 약간의 과대망상 아닌가라며 “유 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당심과 민심 비율이) 5 대 5였는데도 초선인 김은혜 전 의원에게 졌다”고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선 전당대회에서 윤심 향배에도 촉각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주자의 당 대표 출마에 비판적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과 장제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윤영찬 “정영학과 일면식도 없다”... ‘대장동 최초 제보’ 일축

###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 주장에

### “분열 바라는 이들에 기회 주는 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남욱 변호사의 법정 발언으로 인한 오해와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최근 “남 변호사 발언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오해와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모신문에 대장동 관련 내용을 최초 제보했다는 식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다”며 “남 변호사와 문제의 카드뉴스 제작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최근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전화동인 1호 및 ‘50억 클럽’ 관련 자료 및 녹취록 등을 윤 의원에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린 페이스북 글에서 “정 회계사와는 일면식이 없으며, 작년 9월 중순 지인 소개로 정 회계사의 변호인을 단 한 차례 만났다”며 “단순한 인사 자리였고 당시 언론 보도에 나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어떤 자료나 녹취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해 둘 것은 제가 그 분(변호인)과 만난 것은 작년 9월 중순이고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는 작년 8월 31일이었던 것”이라고 시점의 차이를 강조했다.

윤 의원이 이날 연이어 입장을 낸 것은 최근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팔’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 등의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가 공유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의 순서를 뒤섞어 모든 것이 제 맞이라고 우기는 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고 부추기는 악의적인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행안위 장제원...국힘 상임위원장 5명 내정

국민의힘이 8일 여당에 배정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5명의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기재위원장에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에 김태호, 국방위원장에 한기호, 행안위원장에 장제원, 정보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정보위원장 후보자에는 3선의 박덕흠 하태경 의원이 복수로 입후보하면서 경선 끝에 과반 득표를 얻은 박 의원이 선정됐다.

나머지 4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 입후

보해 박수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정됐다.

이들 후보자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뽑힌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단, 행안위원장은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만 위원장을 맡는다. 6월1일부터는 행안위원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오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野 오늘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화지점

